



유통가
경영실패에
기업회생 악용?
03



코스피 2521.39 (+40.27)	↑	코스닥 691.45 (+18.60)
금리 (국고채 3년) 2.581 (+0.012)	↑	환율 (원/달러) 1471.30 (-1.60)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둔 1일 경기도 평택항내 자동차 전용부두에 선적을 기다리는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美관세폭탄 떨어진다 제조업 60% '영향권'

관세부과 임박… 華, 위기감 확산
철강·알루미늄社, 정보부족 호소
美,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 통해
한국과 '절충교역' 문제 제기도
정부, 경제안보전략TF 첫 회의
기업들도 국익차원 최대한 협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 '선험포고'가 임박한 가운데 국내기업들 사이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 제조기업 5곳 가운데 3곳이 미국발 '관세폭탄'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느끼고 있다. 또 철강·알루미늄 업체 다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취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국내 제조기업의 46.3%가 미 관세정책의 '간접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14.0%는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했다. 총 60.3%가 직·간접적 영향을 우려한 것이다.

철강과 알루미늄을 수출하는 중소업계의 경우, 관세 25%를 매기겠다는 백악관 방침에 비상이 걸렸다. 이들은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꼽았다. 우리 정부의 역할론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3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수출 중소기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애로 사항으로 관세정책에 대한 정확한 파악 어려움(41.8%)을 가장 많이 거론했다. 이어 물류비용 상승(38.2%), 수출 국다변화 비용 발생(36.5%), 관세대상 여부 확인 어려움(28.2%) 등도 꼽았다.

게다가 미국 정부에서 국제 통상 교섭 등을 총괄하는 USTR(무역대표부)는 '상호관세'를 발표하기 앞서 한국을 포함한 59개 교역 상대국의 무역 장벽을 담은 보고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과 교역에 대해 외국에서 1000만 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 계약상 대방으로부터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의미하는 '절충교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미국 정부가 이를 문제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보고서엔 미국 기업들이 무역에 어려움을 느끼는 한국의 각종 제도들이 분야별로 망라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보고서를 토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에 책임질 세율의 설명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도 관세전쟁 상황에서 민관 역량을 결집하고, 미국의 관세조치 등이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경제안보전략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종로구 공관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 모인 4대그룹 총수들은 통상위기 극복에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고 기업들도 국익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세제지원 등 지원책의 조속한 마련, 대미 협상 총력 경주 등을 요청했다.

/세종=김연세, 박태홍 기자 kys@metroseoul.co.kr

전장 키우는 JY·구광모, 글로벌 '합종연횡'

삼성전자, 중국 전기차 기업 협력
LG그룹, 글로벌 완성차 집중 공략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구광모 LG 그룹 회장이 그룹의 미래 먹거리인 '자동차 전자장비(전자장비)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합종연횡'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급격한 자동차 전동화 추세와 자율주행 전환에 맞춰 관련 시장 선점을 위해 그룹 총수는 물론 계열사 경영진까지 나서 유력 자동차 기업들과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모습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최근 중국 출장 길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핵심 사업 수장들이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가 전장 사업을 강화하는 가운데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내 관련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 회장은 전영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장(부회장),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사장과 함께 지난 22일 베이징 샤오미 공장, 24일 남부 광둥 선전 BYD 공장 등을 방문해 최고경영진과의 만남을 가졌다.

특히 BYD 왕촨푸 회장이 삼성 경영진과 만난 후 곧바로 자율주행 기술 대중화와 관련해 앞으로 2~3년 안에 획기적인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언급해 삼성전자의 관심이 쏠렸다.

중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삼성그룹의 핵심 사업과 연결된 전략적 시장이다. 삼성전자 반도체는 2014년부터 중국 시안에 낸드플래시 메모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에는 천진과 광둥 동관에서 중소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모듈

을 각각 1999년과 2004년부터 생산하고 있다. 삼성SDI는 2008년부터 천진에서 전기차 및 소형IT 기기 등에 사용되는 소형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으며, 시안에서는 2015년부터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장치(ESS)의 각형 배터리 공장을 운영중이며 조만간 신규투자도 준비중이다. 삼성의 중국 현지 매출과 영업이익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매출은 64조 9275억원으로 전년(42조 207억원)보다 53.9%(약 22조 7000억원) 증가했다.

지난달 27일 올해 첫 사장단 회의를 소집하고 '2025년판 위기극복'을 위한 '절박감'을 주문한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집중 공략 한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결정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 경찰버스가 세워져 있다.

/뉴스

4일 '尹 운명의 날'… 11시 탄핵심판 선고

현재, 기자단 공지 통해 예고
방송 생중계·일반 방청 허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 이뤄진다. 선고 당일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부터 123일째 되는 날이다.

헌법재판소는 1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2024년 4월 4일(금)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며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4일은 최종변론 이후 39일 째가 되는 날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료한 후 35일 만에

집혔다. 전례에 비춰 변론 종료 후 2주 내 선고할 것이라는 대다수의 관측을 갚 것이다.

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이 지난해 12월 14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 111일 만에 결론이 나오는 것으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간 심리한 셈이기도 하다.

현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63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간 심리를 진행했으며, 마지막 변론기일이 끝난 지 각각 14일, 11일 만에 결론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가 탄핵안을 인용하게 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그리고 60일 내 대통령 선거가

치뤄져야 하므로, 오는 6월 3일까지는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그리고 새 대통령 선출 시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지속된다.

반면 현재가 기각·각하 판결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탄핵소추 111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종료되는 것이다.

한편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사위원회)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통지 받았다고 알렸다. 정 위원장은 "현재로부터 연락 받았다"며 선고기일 통지를 알리는 현재 공문 사진도 함께 게시했다.

/서예진 기자 syj@



▲尹, 나경원·전한길과 책 낸다… '새로운 대한민국' 10일부터 예약
▲ 권성동, 한 대통령에 '헌법재판관 경호 강화·현재 안전 유지' 요청

/사진 뉴시스

▲ '1심 무죄'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 6월 3일 결심… 선고는 미정

▲ 민주 "현재,尹 파면으로 국헌 수호 의지 보여 줄 것 믿어"

▲ 조국혁신당 "정부·여당, 상법 개정안 거부권 역풍 직면할 것"

▲ 국회 APEC 특위 출범… 위원장에 국민의힘 김기현